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 - 2022]

2017년 12월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I. 정책 현황 분석	1
1. 보육 정책 현황	2
2. 그간의 주요 보육정책 성과	4
3.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8
II.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방향	13
III. 목표별 세부추진전략	18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9
2. 보육체계 개편	24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27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33
IV. 과제 실행기반	36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배경(수립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5년 단위의 보육계획 수립)

□ 과거연혁

○ 새싹플랜('06~'08) :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여성가족부 수립)

○ 아이사랑플랜('09~'12) : 복지부 보육업무 이관 후 1차 계획 수정보완,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중심으로 설정

○ 2차 기본계획('13~'17) : 무상보육 도입과 수요자 맞춤 지원 중점

□ 제3차 기본계획 수립경과

○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17.7월~12월)

○ 전문가가 포함된 '보육정책 발전 포럼'운영('17.9월~10월)

- * ①보육의 질 제고 ②공보육 인프라 확충 ③보육·양육비용 적정화 ④육아지원 다양화의 4개 분과구성·논의(15회)

○ 전문가·어린이집 등 보육현장 대상 공청회('17.11.27.)

○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수렴('17.12.11~19.)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발표('17.12.27.)

I. 정책현황 분석

1. 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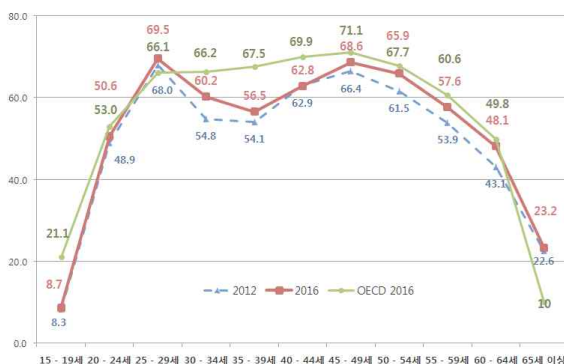
① 저출산 지속으로 전체 영유아 수는 감소 추세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16년)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
 - * OECD 평균 1.68, 프랑스 1.92, 미국 1.84, 영국 1.80, 일본 1.45
- 출생아 수는 '12년 48.5만명에서 '17년 36만명(잠정)으로 지속 감소세, **보육지원 대상인 0~5세 영유아 수도 지속 감소**
 - 현 추이 지속시 영유아 수는 現 310만명대에서 **'25년 280만명대로 감소 전망**(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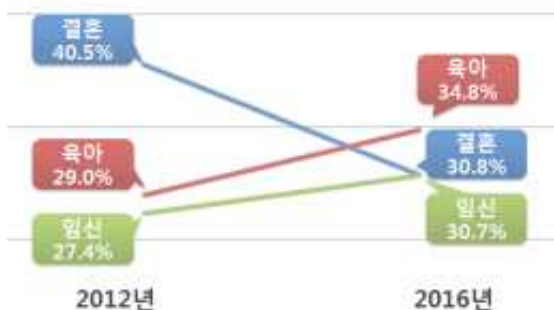
② 여성 경제활동은 증가하나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은 여전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 OECD 대비(62.8%)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 중('12년 53.5% → '16년 56.2%)
- 자녀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는 M-Curve 현상도 지속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이며, 특히 맞벌이 가구는 출퇴근 포함 평균 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
 - * 연간 근로시간 비교('16) : 우리나라 2,069시간 對 OECD평균 1,764시간

< 연령대별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 '16년) >



<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 사유 >



③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및 이용 시작시기 조기화

- 영아의 시설 이용비율(36%)은 무상보육 도입, 시설이용에 대한 거부감 약화 등으로 OECD 평균(34.4%) 이상으로 단기에 급증
- 특히,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도 빨라지는 경향
- *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 : '12년 28.3개월 → '15년 26.5개월('15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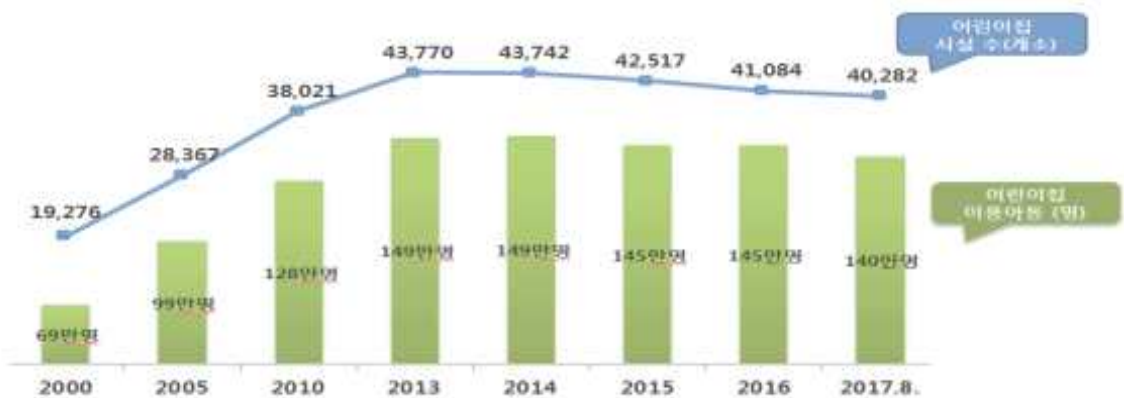
< 영아의 시설 이용률 국제비교(OECD Family Data) >

구분	OECD 평균	프랑스	스웨덴	영국	한국	독일	일본
'06	29.0%	42.4%	45.7%	39.7%	11.2%	13.6%	28.3% ('12년)
'14	34.4%	51.9%	46.9%	33.6%	36.0% ('16년)	32.3%	30.6%

④ 어린이집 시설 수가 감소하면서 구조조정 양상

- 과거 여성 사회진출 증가와 보육료 지원 확대에 의해 지속 증가해온 보육 시설은 영유아 수 감소로 '13년을 정점으로 감소

< 인가된 어린이집 전체 정원대비 이용아동 비율 >



- 49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감소하나 50~99인 규모의 중형 어린이집은 증가*하는 등 어린이집간 구조조정 양상 발생

* 규모별 어린이집 현황 ▲49인 이하 : '13년 34천개소 → '17년 30천개소(△4천)
 ▲50~99인 : '13년 6.8천개소 → '17년 7.4천개소(+0.5천)

2. 그간의 주요 보육정책 성과

①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

- (부모부담 경감) '13년 보육료·양육수당 쏠계층 지원 실시
 - 영유아 1명당 부모의 월 평균보육비용은 '12년 대비 '15년에 41%감소('12년 20.9만원 → '15년 12.2만원) 된 것으로 조사
 - 지방재정의 부담완화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보육료·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 15%p 인상('14년)
- (맞벌이 지원 확대) 맞벌이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보장('14년), 휴일·야간의 시간연장 보육 강화, 맞춤형 보육 도입('16년)으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추진
 -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어린이집 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시간제 보육 도입('14년) 및 제공기관 확대('14년 97개 반 → '16년 382개 반)
 - 어린이집 입소대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에 확대 적용하여 부모 편의 증진과 투명한 대기자 관리 기반 마련('14년)

<연도별 지원 대상 변화 >



< 재정투자 및 지원 영유아 추이 >



② 국공립 등 공보육 시설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1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여 과거 5년간 약 900여개 (140% ↑) 증가

* '12년 2,203개소(이용률 10.1%) → '17년 3,090개소(이용률 13.1%)

-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확충 등 설치 확대
- 민간단체의 사회공헌 방식의 확충* 등 민·관 연계를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식 도입

* 전경련, 생명보험재단, 기업 등에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어린이집 건립 후 지자체 기부채납 등으로 약 100여개 설치

-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설치의무 부과* 및 직접적인 설치 지원으로 '12년 523개소 → '17년 1,033개소로 확대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시설은 의무설치 대상

- 설치의무 이행 강제를 위해 의무 미 이행시 명단공표 외에 이행 강제금 부과 도입('16년)으로 이행률 제고('15년 53% → '16년 82%)

-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

- 재무건전성, 운영책임성, 교사전문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선정함으로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쟁을 통한 전반적 질 개선 유도

* 임대료 및 용자상환액 10% 이하, 대표자·원장 동일시설로 운영책임성 보장되는 곳 우선고려, 1급 교사 비율과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시설

- 공공형 선정시 교사 역량 제고 및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국공립 수준의 운영* 유도를 위한 관리

* 보육료 부모부담분 미수납, 국공립 1호봉 수준의 교사 인건비 지급, 취약보육 제공 등 의무 부과

③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기반 강화

- (보육과정 개편) 유아(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춘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누리과정' 도입 및 영아 표준보육과정 개편('13.3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 보장
 -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누리과정 담임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운영비 지원(월 7만원/유아 1인당)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누리과정 이해제고 및 과정 운영에 관한 교육 참여 의무화

- (평가인증제도 개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육의 품질 향상* 유도

*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78.6%(15년 보육실태조사), 인증 어린이집(3.95점) > 미인증 어린이집(3.78점)(부모 만족도, '14, 육아정책연구소)

- 지속적인 평가인증 지표 개선과 컨설팅, 평가결과와 지원제도 연계로 상시적인 어린이집 품질관리 추진
- 특히 '17년부터 현장중심의 평가 및 등급제 방식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보육 질 개선에 중점('17.11월)

< 평가인증 제도 개선 경과 >

1차지표('06년)	2차지표('10년)	3차 시범지표('13년)	유·보통합지표('17년)
√인증점수(70점)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적 질 향상 유도 √7개영역 85항목	√통과 점수 상향(75점) √교사관련 평가 확대 √70개 지표, 218개 평가단위	√시설별 지표 통합 √질 향상 노력 반영 √50개 지표, 308개 평가단위	√등급제전환(4등급) √현장평가 강화 √21개 지표, 123개 평가 단위

- (교사 업무부담 경감) 보조·대체교사의 법적 근거 마련('15.9월) 및 인력 확대('17년 2.1만명), 처우개선비 인상('13년 12만원→ '17년 22만원)
 - 보조교사 등 지원으로 교사 1인당 담당영유아 수는 '12년 7.3명에서 '16년 6.3명으로 감소

④ 어린이집 부모참여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부모참여 확대)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권 및 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등 수요자·부모 중심보육으로 보육기조 전환
 -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개방형 체계로 전환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확산('17년 1,859개소)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CCTV 설치 의무화('15년 설치 완료), 부모열람보장과 교사 인권보호를 위한 열람가이드라인 배포·운영
 - 보육교사 신규 자격과정에 인성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15.9월)
 - 아동학대시 명단공표('13.12월), 원장·교사의 자격재교부 20년간 제한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금지 20년으로 확대 등 처벌 강화('15.9월)
- (시설·차량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한 어린이집 사전 안전진단·컨설팅 실시로 전문적인 안전관리 지원('15년~)
 -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교육의무화('14.2월), 통학차량 전수조사('14년~)를 통한 실태관리, 보육교직원 차량 동승 의무화('14.5월)

⑤ 부모 직접양육에 대한 지원체계 도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 중심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편('13.12월)하여 부모 교육 및 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보호자 교육) 부모대상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시 교육관련 정보 제공('16.11월), 보호자 교육의 법적근거 마련('17.9월)
- (부모 양육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이트 통합 운영('15.12월) 및 출생 신고시 관련 서비스*의 One-Stop 신청으로 부모편의 제공

* ▲양육수당·보육료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유축기 대여 ▲다둥이 카드 등

3.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①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적정 이용 보장에 한계

○ 무상보육 및 단일(12시간) 보육료 지원체계의 문제 발생

- 공급자가 단시간 보육을 선호하게 되어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가 충분히 시설 이용을 못하는 현상 초래

*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 희망시각은 9시간 6분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7시간 59분('15년 보육실태조사)

- 맞춤형 보육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격과 시간을 구분하려 했으나 인위적인 자격구분 등으로 부모의 선택과 이용 보장에 한계

○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 부족

- 무상보육 도입 이후 보육예산 급증('12년 6.6조원 → '17년 10.6조원)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추가적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는 부족

* 0~2세 보육료는 '11~'14년간 동결, 3~5세 누리과정은 '15년 이후 지속 동결

-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보육료 지원은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

* 어린이집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 수납한도액 : 시·도별 월 4.4만원 ~9만원

** 3~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추가 보육료납부액 : 시·도별 월 3.3만원~8.7만원

<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 수준('17년 0~2세 보육료) >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표준보육 비용(A)	831천원	598천원	482천원
정부지원 보육료 (B)	825천원	569천원	438천원
표준보육비용 대비(B/A)	99.3%	95.2%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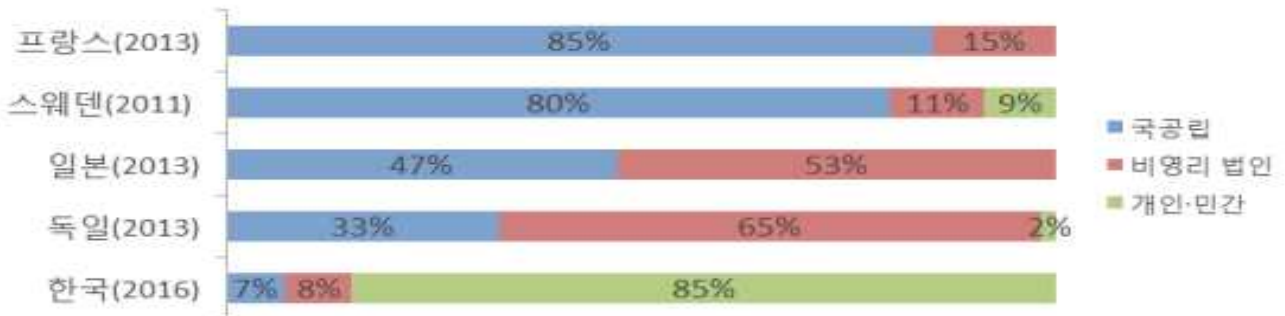
② 양적·질적 측면의 낮은 어린이집 공공성

○ 양적인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족한 상황

-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국공립 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평균 입소대기자 현황('16년) : 국공립 90명, 기타(국공립·직장 제외) 8.5명

< 주요국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이용 비율('17.8월 기준)은 최고가 서울(31.5%), 최저는 대전(4.4%)으로 지역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의 격차 상당

* 국공립의 65.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신규 확충 물량의 73.1%를 수도권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점유

- 민간의 기부채납을 통해 확충된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운영비 국비 미지원으로 지자체의 추가확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도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인 곳이 약 56%로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할 장치 마련이 요구 됨

- 동일 수탁자에 대한 10년 이상의 장기 위탁이 개인위탁의 35%

< 국공립 위탁 대상별 현황 >

계	직영	개인	사회 복지법인 등	기타 (육아종 등)
3,047개소 (100%)	83개소 (2.7%)	1,699개소 (55.8%)	1,012개소 (33.1%)	253개소 (8.3%)

③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은 미충족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약 20%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지 않는 상황('16년)
-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13~)은 아동 발달, 부모 요구 다각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
- 보육서비스 질의 핵심요소인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신뢰
 - 유치원 교사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한 학점이수 방식의 신규 교사 양성체계는 보육교사 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원장 자격 취득이 유치원(교사 취득 후 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최소 4년)하여 격차 해소 필요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대비 낮은 처우는 양질의 인력 유입 제약과 이탈을 초래

* 재직 중인 보육교사 평균 호봉이 '12년 5호봉 → '15년 4.8호봉으로 낮아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 비교>

구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구분	▶보육교사 1, 2, 3급	▶유치원교사 1, 2급, 준교사
자격방식	▶ 학점 단위의 개방형 관련 과목 학점 이수시 자격부여 (최소 고졸) ▶2급 총 51학점(성적제한 없음)	▶ 학과 단위의 목적형 최소 전문대이상의 <u>관련학과</u> <u>졸업시</u> 자격부여(교직이수) ▶2급 총 72학점 이수(성적기준 있음)
양성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학점은행, 기타 보육교사 교육원	▶일반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월평균 급여 (2015)	▶국공립어린이집 210.4만원 ▶민간 어린이집 163.4만원	▶국공립유치원 233.4만원 ▶사립 유치원 201.3만원

④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 지원은 부족

- 최근 부모들의 **독박육아 부담** 호소와 함께 육아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및 육아부담으로 인한 **가정 내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 증가
 - * 아동학대 부모의 주요 특성 1위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3.5%)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모상담·교육 등 **부모의 가정 내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은 낮음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77개소('17.9월)로 미설치된 151개 시·군은 시·도센터에서 지원 중이나 지역밀착 지원에는 한계
- **부모교육의 법적근거가 마련('17.9월)되었으나 교육 참여 규모는 '17년 약 9만명(전체영유아의 2%) 수준으로 활성화 필요**

⑤ 보육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

- **정보 전달체계가 미흡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관리 비효율 초래**
 - 보육제도 확대과정에서 **사업별로 따로 도입된 15개 전산 시스템***의 정보 전달체계 미흡**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
 - * 보육시스템은 어린이집 및 행정 지원 5개 시스템, 임신·육아, 정보공시 등 5개 포털 시스템, 평가인증·안전공제 관리 등 5개 시스템 등 15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
 - ** 예) 보육교사 자격시스템과 보육교사 임용·관리 시스템의 미연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스템과 지도점검 시스템간 별도 운영
-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적 질 관리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등 **지원기관의 기능과 위상강화** 필요한 시점
 -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 및 보육교사 자격관리를 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어린이집 관리와 역할 확대에 한계

※ 보육 현장 의견

1. 전문가 대상, 우선 추진필요 보육정책 과제에 대한 설문

구분	개선필요도(1순위)
(1)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31.8%
(2)어린이집 유치원간 격차해소	29.5%
(3)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9.1%
(4)보육교사의 처우개선	9.1%
(5)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만족도 제고	6.8%
(6)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추진과제	4.5%
(7)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지원	2.3%
(8)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2.3%

*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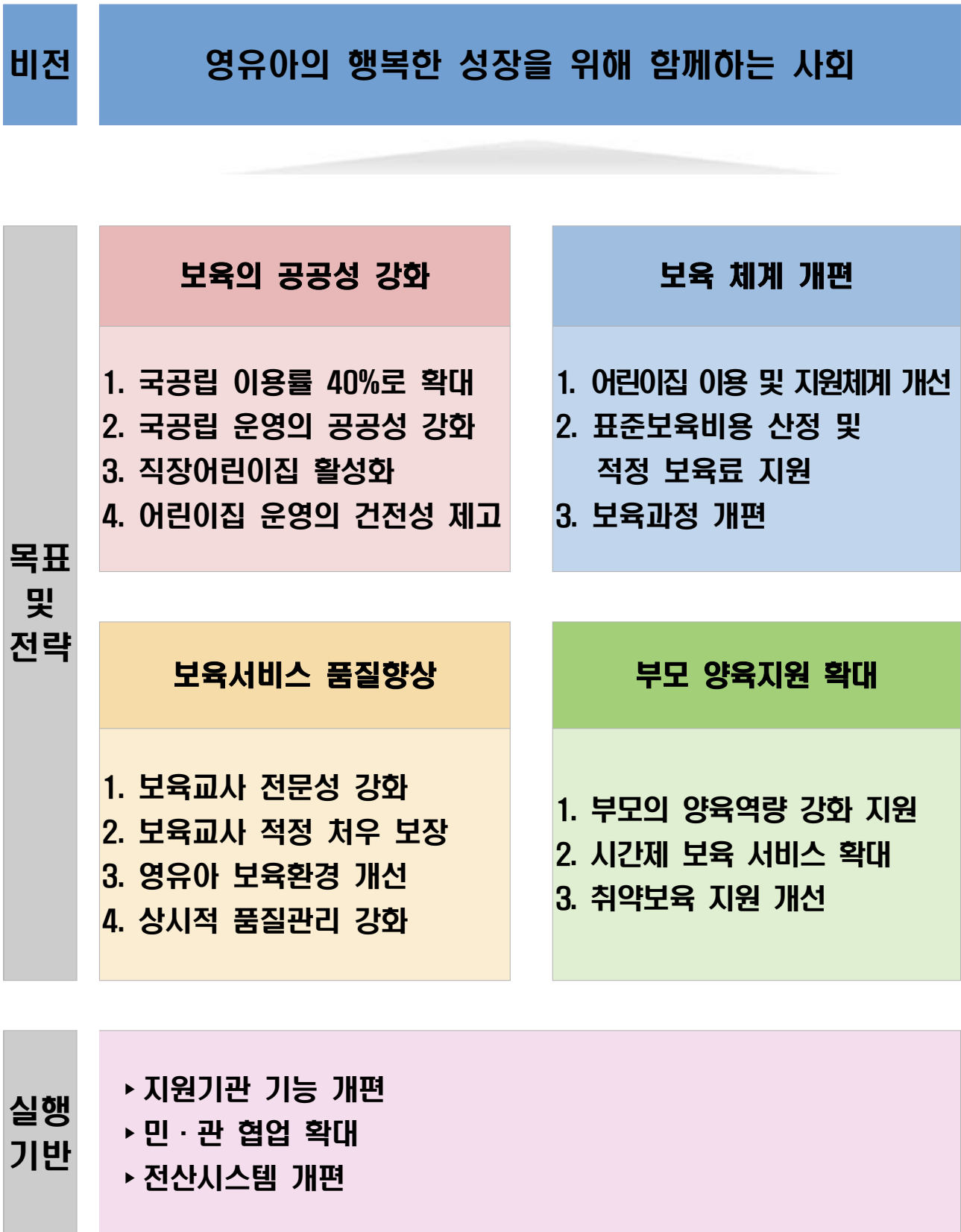
2.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정책 체감도(점수가 높을수록 체감도 높음)

구분	평균 (5점)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1) 보육료 지원에의한 양육비용 부담 경감 수준	3.40
	2) 어린이집의 추가 경비부담 수준	2.88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3) 맞벌이·한부모 등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	3.15
	4) 장애아 보육에 적합한 시설, 설비, 특수교사 등의 제공	2.62
	5) 다문화 영유아 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 교재·교구 지원	2.8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6) 국공립 어린이집이 충분하게 공급됨	2.22
	7) 원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어렵지 않음	1.95
	8) 취업부모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충분히 설치됨	2.06
	9) 공공형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음	2.12
	10)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음	2.63
	11) 어린이집의 환경, 설비,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 만족	3.05
	12)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3.02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13) 보육교사의 전문성	3.21
	14)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좋음	2.65
	15)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3.21
	16) 시설, 급간식 등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의 안전성	3.30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17)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2.98
	18) 부모와 어린이집의 소통과 부모참여 보장	3.18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1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도움정도	2.99
	20)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 용이성	2.79

*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요구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이용부모 699명 응답 분석

II.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방향

<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 >



1 중장기 비전

□ [비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 [4대 목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효과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체계 개편
-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 부모 양육지원 확대

2 정책 과제

◇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특히, 공공성 제고와 보육서비스 질 강화 방안 집중 추진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역적 균형 확충을 통해 보육의 양적인 공공성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식 개선, 취약보육 운영 의무 확대 등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제도의 강화와 직접설치 지원 확대로 근로자의 보육시설 이용여건 개선
- 모든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원장 자격 강화 및 공공형 관리 확대 등 운영의 건전성 제고

② 보육체계 개편

- 부모의 어린이집 적정이용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여부, 이용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체계 개선
- 영유아 보육환경 변화와 누리과정 개편 등을 고려해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표준보육과정 개정 추진
-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표준보육비용 계측과 이에 따른 적정 보육료 지원

③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유치원과의 교사자격·시설 환경 등의 격차 해소를 통해 어디에 서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우수 보육교사 양성과 질 담보를 위해 보육교사 학과제를 도입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처우도 보장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개선과 함께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도 전환, 지도점검 체계화, 어린이집 운영에의 부모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④ 부모 양육 지원 확대

- 부모상담 확대, 체계적인 부모교육 지원 등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내 양육 지원 확대
- 제공기관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으로 시간제보육 접근성 제고

⑤ 실행기반 강화

-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기관의 기능개편과 민·관 협업 확대로 정책과제 추진 동력 제고
-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추진

3

달라지는 지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국가책임보육 기반 조성(~'17)

-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부모교육 등 편의 증진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신뢰 증진
-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분야	지표	'17년	'22년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용률 14%	이용률 40%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81.5%('16년)	90%
	· 열린어린이집	1,859개소	5,750개소
보육체계 개편	· 보육지원체계 개편	맞춤형 보육 (12시간반, 6시간반)	지원시간 다양화
	· 표준보육과정 개선	'13년 기준	개정·보급
	· 표준보육보육비용 재계측	'14년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 보육교사 양성체계	학점제	학과제
	· 보수교육 관리	시·도 개별	총괄관리기관 운영
	· 보조·대체교사 지원	2.1 만명	2.8 만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0-2세 22만원 3-5세 30만원	보육료 인상과 연계해 처우개선
	· 평가인증제도 개선	평가인증제도 (신청 어린이집 평가)	평가제도 (모든 어린이집 평가)
부모 양육지원 확대	· 부모교육 실시 인원	연 9만명	연 30만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전국 87개소	전체 시군구 지원
	· 시간제 보육반 확대	380개반	점진적 확대

III. 목표별 세부 추진전략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①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

- 신축 지원 단가 인상, 지자체 자체설치 시설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22)
- 서울-지방 간 재정적 여력에 대한 고려 없는 획일적인 국고 보조율(50%)을 개선한 차등보조율 도입 검토(~'22)
- 각 시·군·구별 연 1개소 이상 확충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수요 1천명 이상의 읍·면·동 우선 설치(~'22)
 - 농어촌의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정부지원 시설의 전환 추진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 확보('18)
 - 부모 접근성이 높은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의무화
 -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의무 설치,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공공청사·학교 내 유휴 공간 활용 등 국공립 확대 기반 조성
- 기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 신규 도입('18년)
 -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으로의 매입·전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지원액('17년 국비 2.1억원) 현실화

③ '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추진

- 매년 확충 추이 점검과 함께 출산 동향,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따른 유아 수요 등 종합적 환경 고려를 통해 매년 목표 설정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

- 위탁체 자격 기준, 선정 절차, 사후모니터링 등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전반에 걸쳐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22)
- 개인중심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식을 공공성·책임성이 강화된 운영방식으로 전환(~'22)
 - 위탁체 선정 시 사회적 경제조직 및 공공기관을 우선 고려하고, 신규 설치시설의 개인 위탁 최소화(40%이하로 축소)
 - * 국공립 위탁체 현황('17.6월): 개인(55.8%), 법인(33.1%), 사회적협동조합(0.6%)
 - 장기간 위탁에 따른 사유화를 제한하고, 공개경쟁을 활성화하여 우수 위탁체 선별 및 공공성 확보
- 국공립의 취약보육 운영 의무 확대('18)
 - 취약보육 제공과 함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부모참여가 보장되는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도록 선도모델 제시 및 부모참여 지원

②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질 관리체계 운영

- 신설·민간전환 과정에서 국공립의 공공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평가·현장실사 등을 수행할 전담 지원체계 운영('18)
 -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대상 선정시 대상자 기준 엄격 관리 및 장기임차 후 매입 전환 확대를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 국공립 확충 등 공공보육을 전담하는 조직(예:공공보육과) 신설 추진 및 확충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18)

①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확대 및 의무이행률 90%로 확대

- 행정기관 주도 의무 이행 실태조사 방식 → 사업장 사전 신고 방식으로 전환 등 설치의무 이행 수단 개편('19)
- 설치의무 대체 이행수단으로 인정하는 위탁보육을 예외적 허용*으로 최소화하여 어린이집 직접적인 설치 확대(~'22)
 - * 보육수요가 극히 적거나 업종 성격상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
- 실제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되도록 사업장 내 보육수요를 고려한 최소 설치기준 마련(~'22)
 - 사업장 규모와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 설치 유도
 -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보육수요를 고려해 사업장의 설치 의무대상 여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편 검토

②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지자체 협업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고용부 협조)
 - 자치단체가 부지 제공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17.12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 * (현행) 민간보조금 조성 시설물(직장어린이집)은 기부채납 불가 → (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자치단체의 필요 등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가능
- 중소기업(산업단지형 포함)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관계 부처 협조체계 구축(고용부 협조)
 - * (예) 산단형 수요 발굴 및 산단공의 대표사업주 역할(산업부), 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부지 확보 의무화(국토부), 인·허가 절차 fast-track도입(복지부) 등

①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회계투명성 확보, 수요자 중심성 강화 등 관리 강화(~'22)
 - 어린이집 운영 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무회계 컨설팅을 의무화 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특별활동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한 수납통제를 강화*하고, 부모가 원하는 경우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 * 수납한도액 미준수시 선정 취소를 운영 기준에 명확히 규정
 - 재선정 기준을 선정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운영기준 점검 대상을 2년차까지 확대하여 사후 품질관리를 강화
-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22)
 - 역량있는 보육교사 확보 등을 통해 우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지원기준 인상

②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 보장

- 보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17.10월 56개소)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 등을 통해 협동조합 설치·운영 등 지원방안* 마련(~'22)
 - * 예) 수탁관련 가이드라인, 담당 공무원 인식개선 워크숍 개최 등 교육 강화 등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의 국공립 전환 등 시설유형간 조정을 위한 정비·지원 방안과 법 체계 개선 검토 연구 실시(~'22)

③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원장 배출을 위해
원장 자격 기준 요건 강화('19~)
 - 현행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1년 이상(가정), 3년(가정 외) 기준을 강화하여 **경력자의 전문성 운영 담보**
 - * (유치원 원장) 2급 정교사 취득 후 최소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필요
(어린이집 원장) 2급 보육교사 취득 후 최소 6년,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4년 필요
-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원장을 보조하여 어린이집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할 **중간관리직 신설**(~'22)
 -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하여 보육교사 관리와 보육과정 운영을 총괄할 원감(가칭) 등 도입·지원

④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

- 어린이집의 부채 인정 비율 개선('19~)
 - 이자비용부담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채 인정비율(50%)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0%)으로 정비
 - 신규시설 우선 적용, 기존시설은 유예를 두어 단계적 개선
 - *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46.2% 가 부채 보유('17.6월 정보공시)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건물용자금, 차량할부금) 등의 **지출한도액을 보육료 수입의 15% 이하로 축소**
 - 적립금, 차입금 등에 보육료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2. 보육체계 개편

2-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

① 어린이집 보육 지원 체계 개선 추진('18~)

-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제' 도입
 - 어린이집 이용 현황, 교사의 8시간 근로여건 보장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간·운영시간·이용시간 간 개념 구분
 - 부모가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시간을 도입하고,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 다양화
 - * 예)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으로 이용시간 다원화
- 어린이집 보육시간에 맞춘 등·하원 시간 규정 및 준수 유도
 - 보육시간 중 영유아에 대해 안정적인 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장

② 부모 선택기전 보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18~)

- 부모의 이용의사, 이용시간과 무관한 보육료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어린이집 이용 시 자발적·합리적 부모 선택이 가능한 기제 도입
 - 영유아 돌봄을 위해 기준보다 적은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양육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
- 보육료 지원과의 연계로 보육시간에 적합한 보육 서비스 제공
 - 특히,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서비스 실수요층 요구에 대해 시간연장 보육, 초과근무수당 제공 등으로 적정 보상 지원
- 보육현장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논의 및 학부모, 어린이집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 마련

①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 영유아의 적정한 발달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료 산정의 참고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재계측**(‘18)
- 과거 ‘14년 계측 이후 그간의 물가변화와 시설 규모·유형, 지역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측

※ 표준보육비용

- ▶(개요) 0~5세 영유아에게 일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계측주기와 절차 관련 규정은 없음
- ▶(항목) 어린이집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 설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비용 산정

- 보육료 산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계측 주기와 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정 검토**(~’22)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토대로 적정 보육료 지급기준 산정**

② 적정 보육료 지원 및 부모부담 기준 정비

- **표준보육비용을 토대로 적정 보육료 지급기준 마련**(’19)
- 보육시간, 보육과정 특성(연령, 장애아 등), 어린이집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설정
- 경력 교직원 채용과 **적정 인건비 지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 방안 검토**(’19)

①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

- 그간의 영유아 교육 수요 변화, 누리과정 개편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춘 표준보육과정 개정 추진('19)
 - 특히,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 보장
 - * 아동 권리로 생명·보호·교육과 함께 놀이·여가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권리헌장' 발표('16.5월)
- 표준보육과정의 확산·반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 과정 및 직무 교육* 반영, 보육과정 컨설팅, 평가제 반영 등 관련제도 연계 강화('19)
 - * 직접 관찰, 1:1 컨설팅, 모범 사례 동영상 제작·배포 등 교육방식 다양화

② 특별활동 개선 및 운영 합리화

- 특별활동 운영 및 대체활동 제공 등에 대한 평가인증 반영 개선으로 어린이집의 과도한 특별활동 참여 유인 방지('18)
- 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부모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 운영기준 개선('19)
 -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보 공시 기록 의무 준수유도 및 운영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 관리 철저
 - * 특별활동 대상, 운영시기, 대체프로그램 제공 여부, 수납한도 준수 등
-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 제도 도입 검토('19)
 - 특별활동 제공기관, 운영 과목, 강사 등의 등록으로 특별활동 제공 수준을 파악하고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부모 알권리 보장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3-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①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재편하여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 격차 해소 추진
 - 양성과정 설계·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을 통한 보육교사 신규 자격 취득 활성화
 - 대학 외 보육교사 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사 양성과정의 개선 추진
-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유아교사 자격 신설 방안 검토(교육부 협의, ~'22)
 - 공통 자격과 교육과정 신설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교사 실태조사 선행 실시

②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

- 신규진입, 경력단절 후 복귀, 보수교육 이수 횟수 등을 고려한 보수교육 커리큘럼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 제고('19)
 - 온라인 교육 인정 범위 개선으로 실습 및 집합교육이 필요한 교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이수토록 의무화
 - 개별 상황에 맞추어 보수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필요과목 선택적 이수* 등 보수교육 과정 구성방식 개선
- * 보수교육 교과목을 필수교육 및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전체 교육시간에서 일부분을 선택과목 중 자유롭게 선택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육과정 준비를 위한 시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새학기 시작 전 ‘어린이집 방학’ 도입 검토(‘20)
- 방학기간 중 영유아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사전안내 및 맞벌이 등 자녀에 대한 시간제 보육 연계 등 대체 돌봄서비스 제공

③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

- 각 시·도별로 개별 위임된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수교육 총괄관리기관 운영 및 보수교육 기관 평가·관리(‘19)
- 표준 커리큘럼 관리, 보수교육 강사 관리, 교육 기관 선정 및 평가, 온라인 교육 총괄 등의 종합관리로 지역별·기관별 편차 해소
-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보육교사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보육교사 이력 종합 관리체계 구축 및 연차별 맞춤형 보수교육 지원(‘19)

3-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①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수준을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 추진('19~)
-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계기로 한 보육료 인상 지원으로 국공립·민간 간 급여 격차 해소 및 우수인력 진입 유도
- 보육교사의 업무 난이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 등 급여를 통한 처우개선('22)
- 보육체계 개편시 보육교사 적정 근로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보장 체계 마련('18~)

②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

-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 확대(~'22)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참여, 연가 등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확대 및 지원 역할 강화* 추진(~'22)
- * 신학기 적응지원, 현장학습 지원,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 등 역할 확대

③ 교사 업무부담 경감

-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19)
- * 어린이집 방문상담, 고위험 교사에 대한 전문상담 연계 등
- 어린이집의 출결관리, 보육료 신청 등 전산을 통해 자동화 가능한 사항 개발(스마트 어린이집)로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19)
- 보육교사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실시('18)
- * 보육교사 수기 공모전, 인식개선 홍보영상 등

①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

○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개편 방안 마련('20)

- 교사와 아동 및 아동 간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집단 크기와 구성방안 마련

* 교사 대 아동비율 외에 보육교직원(사무원, 조리원) 배치에 따른 보육교사의 보육 집중 시간과 질을 고려한 '보육교직원 대 아동비율'도 검토

○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겸직 원장' 허용범위 축소('19~)

-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원장의 사무를 고려하여 원장의 반 배정을 지양하고, 겸직은 예외적으로 허용

* 예시) 현행 어린이집 정원 20인 이하 → 10인 이하 어린이집만 허용

○ 탄력보육 최소화('18~)

-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던 탄력보육은 허용사유 제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축소 운영

②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유치원과의 설치기준 격차 해소 추진('18~)

- 교사실 설치 의무화, 화재 대비시설 보완, 놀이터 설치 기준 확대 등

○ 보육실 면적기준*(영유아 1인당 2.64m²)을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재설정(~'22)

*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시 설정

①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 해소('18)
 - 평가등급별(A-B-C-D)로 유효기간 차등 설정 및 최하위 등급에 대한 재평가, 사후컨설팅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 상향 유도
 - 평가결과와 어린이집 지원간 연계* 강화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인
 -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반영, 보조교사 지원 등
 - 현장 관찰·면담의 비중을 높이고 평가지표도 간소화하여 평가에 따른 보육교사의 부담 경감, 어린이집 평가수수료 부담 면제
- 평가 등급, 내용 등 주요 정보의 부모제공으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18)

②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

- 어린이집 관리 업무인 지도점검(법령위반)·평가제(품질평가)·컨설팅(개선지원)간 유사·중복 기능 정비 및 연계 강화('19)
- 지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0)
 - 어린이집 입력정보(재무회계, 교사채용 등), 공적자료 연계 및 활용 확대*로 현장방문 전 시스템을 통한 정보 활용과 상시관리 강화
 - * 부정수급의심유형 발굴 및 사전 모니터링 중('17년 39종)
 - 지도점검, 컨설팅 이력, 평가정보의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 * 전국, 시도별, 시군구별, '위반유형, 행정처분 유형, 점검·처분의 적정성 등의 분석을 위한 자료축적 및 검색기능 강화 포함

③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대상 안전사고 예방·대응교육 다양화로 각종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18)
 -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습중심으로 개선하고 영아분야도 확대, 시설 안전컨설팅 추진(연 100개소 이상)
-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예방, 통학차량·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복지부·식약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지속 실시(매년 하·동절기)
 -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후 미비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감염병, 미세먼지, 지진, 석면 등 각종 질병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범부처 협조체제 확대('18~, 지속추진)
 - * 지진·화재 등 재난관리(행정안전부), 미세먼지·석면(환경부), 식중독예방(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학차량안전(경찰청), 결핵 등 감염병 관리(질병관리본부) 등

④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

-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열린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15% 이상으로 확산(~'22)
 - * '17년 1,859개소 → '21년 5,750개소(전체의 15% 이상)로 확산
- 열린어린이집 지정시 자율적인 운영 보장(지도점검 등 유예)과 인센티브 제공(공공형 선정,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으로 참여 유도
-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연계해 중앙부처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 전담 인력 배치로 부모 불편사항에 대한 대응 강화('18~)
- 어린이집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운영 활성화('18)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4-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① 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부모양육 수준별, 자녀 발달상황별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교육 커리큘럼 체계화('18)
 - 다양한 채널(온라인, 모바일 등)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부모의 부모교육·양육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환기 및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자녀 양육관련 정보 제공안내 확대('19)
 - * 현재 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한 신청시 부모교육 관련 동영상 시청 후 신청가능
-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교육이수자의 성취감 제고를 위해 '부모교육 수료증' 발급 및 인센티브 구조 설계('19)
 - 부모교육 강사 지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통한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

②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 확산으로 부모 지원 확대(~'22)
 - 지역별 영유아 수에 따라 거점형·이동형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확충으로 모든 시·군·구 단위의 서비스 제공추진
- 육아정보 제공·상담, 장난감·교구지원 등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센터간 기능 재개편(~'20)
 - 시도 센터는 센터별 평가 및 지원과 부모지원 서비스 개발 중심, 시군구 센터는 직접적인 부모 양육 지원서비스 제공확대에 중점

4-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①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문화센터·복지센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간제보육반 확대 방안 모색, 지역별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참여 확대 추진('18)
- 시간제 보육 시설 수요와 지역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보육반을 점진적으로 확대('17년 380개반, ~'22)

②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개선

- 맞벌이형-기본형으로 이원화된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부모의 이용 부담완화 및 편의제고('18)

4-3

취약보육 지원 개선

①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 및 실태조사

- 영유아 특성별 보육 취약 계층의 수요와 어린이집의 지원 현황 분석을 위한 취약보육 실태조사 실시('18)
- 영유아 대상별 특성과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의 대상 재검토('19)
 - 과거 설정된('08년) 취약보육의 범주(①영아 ②장애아 ③다문화아동 ④시간연장형)를 최근 현황과 수요에 맞춰 재설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② 취약보육 특성별 보육지원 개선

○ 다문화아동 통합보육을 위한 여건 개선('19)

- 표준보육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반차별, 문화 다양성, 반편견 등 다문화 이해교육 반영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이해교육, 다문화 영유아 교육 방법 등 관련 교육 확대

○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22)

-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연계하여 **장애아 보육 제공기관(장애아전문·통합) 확대 추진**('17년 1,101개소 운영 중)
- 장애영유아의 **전문적 돌봄을 위한 전문 인력 수요 확보를 위해 장애아 전담 보육 교사자격*** 및 양성 체계 정비

*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아전담교사 기준 정비

Ⅳ. 과제 실행기반

1

지원기관 기능 개편

①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법상 재단인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 및 기능 강화 추진(‘18)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진흥원의 법적근거와 업무범위 규정
-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보육교직원 자격관리·보수교육평가 등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역할 강화(‘18~)

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기관으로 기능 확대(‘18~)
 - 안전사고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등 안전예방사업 강화와 보육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및 보급·교육 확대
- 풍수해 상품 보상한도 확대 및 공제상품의 보장성 강화(‘18~)
 - 지진 등 재난대비를 위한 등 어린이집 운영과 각종 사고 대응에 적합한 맞춤형 공제상품 개발 확대

2

민·관 협업 확대

- 각 분야별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내 주요 과제별 소위원회 구성 등 논의 활성화(‘18~)
- 보육단체, 보육교사 등 현장인력의 참여 보장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모니터링 실시(‘18~)

3

전산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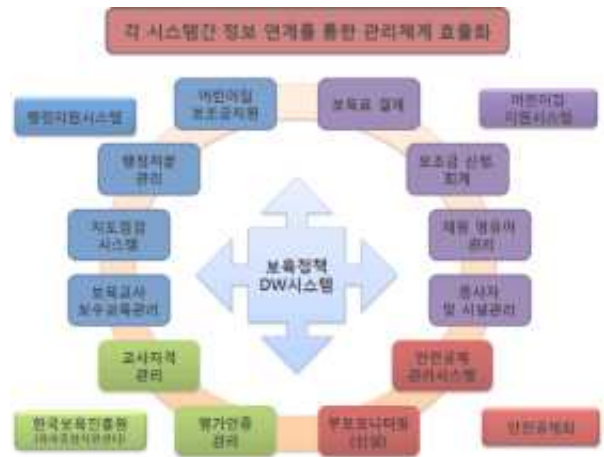
① 행정시스템간 연계 및 DW구축(19)

- 개별 보육제도별로 도입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One-Stop**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각각 관리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도점검, 보육교사 자격·경력 이력 등 각종 정보의 통합관리로 효율적 품질관리 지원
 - * 관련 시스템간(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평가인증 시스템, 교사자격관리 시스템, 교사임용관리, 안전공제관리 시스템) 정보연계
- 어린이집 관련 DW구축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품질 관리 지원에 대한 통계·이력 정보 축적

현재 (As is)



개선방향(To be)



② 어린이집 전산지원으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19~)

- 영유아 출석관리, 보육료 신청 등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전산 자동화**(스마트 어린이집)
 - * 예) 영유아 출석시간 입력시 보육료 신청 자동연계 등
- 어린이집이 등록·관리하는 서식의 **전산화**로 서류작성 부담 최소화

참고 1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경과

□ 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조사('17.10~12월) 및 부모대상 수요조사
-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전문가·대국민 조사'('17.5~6월)
 - 3차 기본계획 방향에 대해 전문가는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확충, 국민은 '어린이집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강조

□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보육 환경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기존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육아정책연구소, '17.7~12월)

□ 보육전문가 의견수렴

- 주요 보육정책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보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 발전 포럼'운영(9~10월)
 - 분야별 심층논의를 위해 ①보육의 질 제고 ②공보육 인프라 확충 ③보육·양육비용 적정화 ④육아지원 다양화의 4개 분과구성·논의(17회)
- 전문가·학계 대상 공청회 및 토론회('17.11.27)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확정

-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수렴('17.12월 초)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17.12.27)

참고 2

과거 중장기 기본계획 주요 개요

① 1차 (새싹플랜, '06~'08)

- 최초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보육업무의 여성가족부 소관 시기에 수립(당초 '06~'10 목표로 수립)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전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② 1차 보완(아이사랑플랜, '09~'12)

- 보육업무의 복지부 이관 이후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기존 계획의 수정·보완을 거쳐 재수립
-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중심으로 설정하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설정

③ 2차 ('13~'17)

- 무상보육 도입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에 중점을 두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설정

